

기보, 중소·벤처기업 기술력 평가로 대출

중소·벤처기업이 자사의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기술평가인증서를 바탕으로 은행으로부터 담보없이 최대 10억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 기술평가인증 제도가 국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과 우리은행(행장 황영기)은 지난 27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은 '여성심사용 기술평가인증제도'를 도입, 올해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기보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기술평가인증서를 제공하면 우리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결정을 하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자체 신용평가를 생략하고 인증서를 바탕으로 여성심사를 실시해 지원기업을 결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기술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으로 대출한도는 10억원이다. 우리은행은 이들 기업에 기존 우대금리보다 0.3%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보는 기술평가인증서가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대출금액의 80%를 부분 보증해준다.

기술평가인증제도는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도입됐다. 기보는 현재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선진 기술평가모형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오는 3월부터 이 제도가 은행권의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기술거래 인수합병(M&A) 등에 본격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코스닥 등록취소 전년비 63% 급증

코스닥 시장의 퇴출 요건 강화로 인해 2004년에는 퇴출 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위원회(위원장 허노중)에 따르면 지난 한해 등록취소가 결정된 기업은 모두 44개사며, 이 중 거래소 상장(3개사), 자진취소(4개사), 피합병(1개사)을 제외한 '강제퇴출' 기업은 36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퇴출요건이 강화된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2002년에는 등록취소 25개사 중 퇴출은 14개사였으며, 2003년에는 등록취소 27개사 중 퇴출이 18개사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강제 퇴출된 기업은 모두 68개사다. 같은 기간 코스닥 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기업은 총 268개사로 등록취소된 96개사를 3배 가까이 웃돌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진입률이 하락하고 퇴출율은 크게 상승하면서 격차가 현격히 줄어드는 추세다. 특히 2004년에는 강제퇴출을 포함한 등록취소(44개사)가 신규등록(48개사)에 근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소속부별로는 벤처기업의 퇴출 증가 추세가 두드러져 올해 36개의 강제퇴출 기업 중 27개사(75.0%)를 차지했다. 한편 투자자들의 투자위험 관리와 퇴출 우려 기업에 대한 예고 기능이 한층 강화되면서 관리종목 지정도 대폭적으로 늘어났다.

코스닥 시장은 지난 해 7월부터 시장평가요건을 강화하는 등 상시적인 퇴출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한해 관리종목 지정 건수는 102건으로 2003년 13건보다 8배 가까이로 늘어났으며 투자유의 종목도 15건에서 20건으로 증가했다. 관리종목이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실제기업 수도 2003년 24개사에서 80개사로 늘어났다.

2004 여성벤처기업인 송년의 밤 'Butterfly Effect' 개최

여성벤처협회(회장 이영남)는 지난 20일 압구정 선상카페 '리버시티'에서 회원사 기업인과 초청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 여성벤처기업인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이번 송년의 밤 행사는 여성벤처인들의 작은 변화가 벤처업계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에 힘이 되는 2005년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Butterfly Effect'라는 행사명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송년 이벤트의 하나로 'With Dance' 행사를 마련,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자이브,



룸바, 왈츠 등의 공연감상은 물론 참여 인사들이 직접 배워보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또한 회원사의 후원으로 불우이웃돕기 자선기금마련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이날 마련된 자선기금전액은 자선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 2004년 12월 25일 서울신문 11면

정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과 관련, 4년간 12조원에 이르는 거액을 벤처에 쏟아붓고 벤처업계에 패자부활전을 도입한 것은 경제회생을 위해 '벤처에 올인' 한 것으로 평가하고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한 기사

▼ 2004년 12월 15일 전자신문 3면

2004년 국내 벤처산업은 5월 벤처대란설 등으로 암울한 침체기였으나, 하반기 들어 정부가 벤처 지원을 약속하면서 활기를 되찾았다는 내용의 2004년 벤처산업 결산 특집기사



산자부, 2005년도 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산업자원부(장관 이회범)는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개발사업 중에서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신청서를 오는 2월 25일까지 접수한다.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이란 국가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단기간에 시급히 개발이 필요한 혁신전략기술, 특허기술, 세계일류화 상품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매년 3억원이내이며 지원기간은 2년에서 3년이다. 신청자격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이며,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협회, 외국기관(기업) 등은 위탁기관으로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를 참조하면 된다.

KOTRA, '2005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KOTRA(대표 오영교)는 최근의 세계시장 흐름을 진단하고 우리 기업에게 효과적인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자 1월 6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 영곡동 KOTRA 국제회의실에서 '2005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KOTRA 8개 해외지역본부장이 연사로 참가해 생생한 수출현장 경험을 토대로 시장별 진출 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 문의 : KOTRA 통상전략팀 (02-3460-7335, 7248)

대덕연구개발특구법, 국회 통과

'대덕연구개발(R&D)특구 특별법'이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위원회 상임위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따라 대덕연구단지(이하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이름을 바꾸고, 3년에 걸쳐 약 4700억원의 특구 조성을 위한 특별 예산이 지원된다.

이날 과기정위에서 통과된 특구법은 당초 정부안에 비해 일부 수정된 것으로 당초 정부안은 '대전광역시'로 한정했으나 '대전인근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대전 주변의 충북 청원의 오창과학산업단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지역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등'자를 새로 넣었다.

특구법의 상임위 통과 사실이 알려지자 대덕연구단지의 각 기관과 이곳에 입주해 있는 벤처기업들은 축제 분위기다.

오명 부총리는 이날 저녁 벤처기업협회 주최의 연말 송년회에 참석해 "이제 과학기술부가 대덕연구단지를 특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추진본부를 만들어 연구결과를 상업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대덕연구단지가 한국 경제 혁신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한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